

건설시장개방에 따른 대응방안

기계설비 쉽게 공략당해, 일반과 전문 업체 협력체제 구축해야



한국건설신문이 창간 5주년을 맞이해 지난 9월8일 개최한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방안」 좌담회에 참석한 우리 협회 박성실 상임부회장은 「전문쪽의 면허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성실 상임부회장은 「건설시장이 개방되면 기계설비가 가장 쉽게 공략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기술개발 축적 이외에는 별다른 대응방안이 없으며, 일반과 전문업체가 서로 보완적으로 협력체제를 구축해 시장개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한 만큼 정부 공사도 설계기준, 공사비 산정, 공기책정 등을 정당하게 해야 할 때가 왔다」면서 「정부가 면허를 발급하고 있는 현행체제 안에서는 특히 전문쪽의 면허기준이 강화되어야 하고, 기술자 보



유와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공사를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우리 협회 박성실 상임부회장을 비롯하여 김호일 국회의원 건설특, 서정식 한전협 국제협력특, 이교선 전기연 선임연구원, 이향렬 건설부 건설경제국장, 정진옥 해전협 부회장, 홍재혁 전전협 부회장 등이 참석해 김수삼 중앙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참석자들은 「국내 건설시장이 개방될 경우 건설업체가 증가해 과당경쟁을 초래, 자본력과 기술력이 뒤지는 중소기업체의 도산이 급격히 늘어나고 고급기술 분야에 있어서 우리 업체가 선진 외국업체의 하청업체화될 우려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선진 고급기술의 이전을 가속화해 우리 업체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향렬 국장이 「시장개방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설명했는데, 「최근의 협상 동향은 외국업체의 토지취득 허용여부에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UR이나 정부조달확장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있지만 서방 선진 7개국 정상회담 이후 올해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의견접근이 이뤄진 분야만이라도 연말에 축소된 타협안으로서 어떻게든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UR서비스협상과정에서 세계 각국이 우리 건설시장개방과 관련 현재 건설협면허를 3년마다 재발급하고 공사수주를 도급한도액으로 제한하는 것에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는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의 바람직한 관계정립을 위한 부대입찰제와 PR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면허체제도 강화해 우리 건설업체가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협상결과에 따른 제도 정비로서는 개방일정에 따른 신규면허발급시한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도급한도액 제도를 개선해서 새로 국내 건설시장에 참여하는 외국에 대해 합리적인 도급한도액 책정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해외건설업의 경우에도 해외 진출을 통한 선진기술과 과학적인 공사관리 능력 배양으로 국내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내 건설시장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확대 개방될 해외시장의 진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라면서 「정부는 외국 선진기술을 적극 유치하고 통상마찰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기업의 토지취득을 용인하는 한편 이들 외국기업의 토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구체적인 허용범위는 공판, 제조, 금융, 첨단 서비스분야에 한정돼 있는 것을 앞으로 외자도입 법상 신고 또는 인가로 외자도입이 가능한 전업종으로 확대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참석자들은 건설시장이 개방될 경우 토목, 건축 등은 외국업체와 비교적 동등한 경쟁이 가능하지만 자본, 설계등 소프트분야에서는 크게 뒤질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산·학·연·관의 종합적인 노력과 기술력 배양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김호일 의원은 「건설시장 개방은 우리 시장을 내주는 만큼 해외에서의 기회도 그만큼 확대된다는 생각을 갖고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좀더 진취적 사고를 바탕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한 다음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불합리한 각종 건설관련 제도의 개선에 나서야 하고 업계는 기술개발에 총력을 경주해야 하며 그동안 다소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일반과 전문업체도 양금을 씻어내고 협조체제를 새롭게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시장개방을 목전에 둔 현상태에서 이에 대비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아직 수립돼 있지 않아 업계 나름대로의 계획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①외국업체에 대한 면허발급여부 ②면허요건 ③PQ제도에 따른 심사안범위, 단계, 조건 등 세부적인 기준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논의됐다.



대한주택공사, 건설시장 개방 대응책 마련

지난 9월16일 주공은 UR서비스협상과 정부 조달협정체결이후 공공공사의 외국업체 참여에 대비해 현행 郡別 제한경쟁입찰을 폐지하고 입찰가격사전심사를 통한 등록제를 도입하는 「건설시장 개방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와관련해 사전심사평가시에 주택건설실적을 높게 배점해 국내 주택건설전문업체를 보호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주공은 모든 건설공사의 국제입찰시행과 사전공고 등 발주기간의 장기화에 대비해 사업추진계획을 조기에 수립하는 대응책도 강구키로 하고 시장개방의 주요문제로 대두되는 각종 인·허가업무수행의 경우 외국 시공업체가 급수하거나 위험물 허가와 도로점용허가 등의 업무대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외국 시공업체에게 계약시 연대보증인과 하자처리계약을 국내 업체로 설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그리고 외국업체의 시공참여시 건설공사의 계약서 지방서 상세설계(詳細設計) 감리감독 등의 현행 기준이 국제관행에 비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기술은 구체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주공은 정부조달협정으로 물품구매에 있어서도 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개방대상품목의 경우 현행 일반경쟁입찰이 시행되는 조립식 육조기와 승강기, 플라스틱창호, 시멘트 문틀 등 4개 품목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다음 외국업체 참여시에는 하자처리와 사후관리를 위해 계약조건을 강화토록 할 방침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던 자재들은 中소보호차원에서 개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